

서울 인쇄생산 전년대비 6.1% 감소

서울지방통계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지역의 산업활동 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생산은 10.6%, 출하는 9.8% 각각 감소했고 재고는 14.3% 증가했다고 밝혔다. 업종별 생산을 보면, 가죽·가방 및 신발이 30.0% 증가한 반면, 의복 및 모피(-7.3%), 화학물 및 화학제품(-79.0%), 인쇄출판(-6.1%), 고무 및 플라스틱(-34.5%), 기타기계 및 장비(-18.1%)가 각각 감소했다.

업종별 출하는 가죽·가방 및 신발이 14.7% 증가했고, 컴퓨터 및 사무기기(-43.2%), 고무 및 플라스틱(-33.5%), 기타 기계 및 장비(-22.6%), 음료식품(-26.4%)이 각각 감소했다. 재고는 1차 금속(-76.7%), 가구 및 기타제품(-45.8%), 기타 기계 및 장비(-31.3%) 등은 감소한 반면 의복 및 모피(16.9%), 음료식품(32.6%), 컴퓨터 및 사무기기(133.2%) 등은 각각 늘어났다. 이밖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백화점(3.1%), 대형마트(7.1%) 등의 판매는 늘어났으며, 건설수주액은 1조2736억 4300만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74.5% 증가, 전국대비 23.4%를 차지했다.

복수조합시대 열린다

2007년에는 단일업종 단일 조합이 복수 조합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단일업종에도 복수 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7월 관련 법령이 개정된 이후 신설조합 설립이 잇따르고 있다.

재생플라스틱업종에서는 기존 한국재생플라스틱조합에 더해 폐합성수지 재활용 가공조합이, 인쇄업종에서는 대전충남 인쇄정보산업조합외에 대전시 인쇄산업조합이, 금형업종에서는 한국금형공업조합외에 대구·경북 금형조합이 각각 설립을 마쳤다.

또 지난 2001년 설립된 CCTV업계 유일의 조합단체인 한국감시기공업협동조합외에 맞서 가칭 한국CCTV산업협동조합이란 전국조합이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처럼 복수조합이 잇따라 생겨나는 것은 중기청이 내년 1월부터 복수조합일 경우 조합도 정부 입찰참여를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부산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 인쇄출판·디자인 등 3개 업종 육성키로

부산시와 부산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는 유통·전자상거래, 인쇄출판·디자인, 사업서비스(법률, 회계, 조사, 컨설팅) 등 3개 업종에 대한 시범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

방자치단체에서 지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사업을 벌이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우선지원 대상업종으로 선정된 3개 업종은 지난 9월 부산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가 실시한 '지식서비스산업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워킹그룹의 토론 등을 통해 부산지역 내 산업 비중이 큰 7개 서비스 업종 가운데 신규 수요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고 업체 경쟁력이 갖춰져 있어 지원시 효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평가에 따라 선정됐다.

부산시는 이들 업종에 대해 업체의 신청을 받아 △교류회 개최 및 지원 △홈페이지 제작 및 개보수 △마케팅 지원 △지역 주요 서비스업체 명감 제작 지원 등의 분야에서 모두 23개 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다.

전통 제조산업에도 나노기술 도입 붐

금형·사출 업계가 나노몰딩기술 도입 공정혁신을 꾀하는 한편, 나노 연구기관 역시 나노를 이용한 미세정밀 가공 기술 개발에 본격 나섰다. 금형·사출 업계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해 나노 분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국내 나노관련 연구기관 역시 나노를 이용한 미세정밀 가공(NEMS) 기술개발에 본격 돌입했다.

우선, 금형 사출업계는 나노몰딩기술을 도입하면서 공정혁신을 꾀하고 있다. '나노몰딩 기술(NMT: Nano Molding Technology)'은 나사 볼트 너트 없이도 나노기술을 이용해 알루미늄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을 접합하는 첨단 기술이다. 알루미늄 등에 나노 크기의 촘촘한 홈을 파낸 후 강한 압력으로 특수 합성수지(플라스틱 원료)를 사출 성형 방식으로 접합시킨다. 프레스가공이나 구멍뚫기 등의 과정이 생략되고 물성이 전혀 다른 소재를 단순하게 접합시키기 때문에 기존 부품보다 50% 정도 가벼우면서도 강도와 경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접합 부위를 망치로 내려쳐도 끄떡없고 결합 부분에 물이 스며들지 않을 만큼 접합도가 뛰어나다.

중소기업CEO 60% 기업승계 원해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32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의 61.2%가 적절한 후계자가 나타날 경우 기업을 승계하겠다고 답했다.

기업 승계의 이유로 중기CEO들은 평생 일군 기업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59%)을 꼽고 직원들의 고용안정(47%)에도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기업승계 후보자로 중소기업인들은 직계후손(38.5%)을 들었으며 내부 임직원(24%), 전문경영인(11.5%) 순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경영승계를 원하는 기업중 체계적인 후계자 양성을 하는 기업(35%)은 적게 나타나 중소기업CEO 전문과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달리 후계자에게 경영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18%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업종의 전망 불투명(48.7%), 경영외적 부담(18.4%), 후계자 미양성(10.5%), 기능승계 불투명(9.2%) 등을 이유로 꼽아 해당업종의 과잉경쟁과 성장불투명, 생산직 인력난 등으로 기업의 존속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승계시 애로사항으로 중소기업CEO는 기업의 상속세 부담(40%)을 꼽았으며 후계자 경영능력 불확신(19.3%), 후계자 양성 전문프로그램 부재(13.9%) 등을 꼽아 상속세 폐지 및 완화와 전문프로그램 마련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 신용보험 가입 급증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들의 신용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신용보험은 중소기업이 신용으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못받을 것에 대비해 드는 보험이다. 신용보증기금은 200년 11월까지 중소기업들의 신용보험 가입액이 2조1천억원으로 연간 예상치 2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신용보험 가입액은 2003년 7천억원에서 2004년 1조3천억원, 2005년 1조7천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외상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경기가 불확실해 질수록 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며 "이런 위험을 덜기 위해 신용보험에 많이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역지정업체 250개 신규 선정

병무청은 2007년도 병역지정업체로 250개 연구기관과 산업체를 신규로 선정하고 현역 입영 대상자 7천명을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형태로 2959개 병역지정업체에 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병무청은 "연구기관 79곳과 산업체 171개 등 250개를 신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과학기술부와 중소기업청 등 추천기관의 추천등급이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정밀 실태조사를 거쳐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체 병역지정업체는 총 1만748개(연구기관 1965, 산업체 8783)로 늘어났다.

병무청은 또 신규 병역지정업체를 포함해 총 2959개 지정업체에 7천명의 현역입영 대상자를 전문연구요원(2500명)과 산업기능요원(4500명)으로 각각 배정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추천권자의 추천등급과 지방병무청장의 복무관리 평가등급이 우수한 업체를 위주로 업종에 따라 연구

기관은 최대 5명, 산업체는 최대 4명까지 확대했다. 반면 평가등급이 낮은 업체는 인원 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지정업체의 자율 복무관리 체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지준을 인상으로 "중기 어려움 가중"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한국은행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일부 예금의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중앙회는 "각종 실물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중의 유동성 흡수는 결국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다시 자금력과 신용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한은의 조치로 영세기업일수록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특히 창업기업이나 초기 성장기업, 시설투자를 계획중인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지급준비율 인상폭과 기간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점검해 내수와 투자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단체표준인증제품 우대 검토"

김용민 조달청장은 최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양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기술우수제품에 대한 '적정가격산정체계'를 마련해 모든 공공기관에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비용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기업의 R&D 비용 등을 감안한 가격을 공시함으로써 공공구매 담당자에게 신뢰성있는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의 큰 시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나라장터 쇼핑몰은 수요기관이 원하는 물품을 원클릭(One-click)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공공기관 최대의 종합쇼핑몰로 2005년도에 5조5천억원의 거래규모를 기록했다. 품목수만도 올해 7만개에서 내년에는 10개로 늘어날 계획이다. 특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에 의해 연중 아무 때나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어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시장에 쉽게 진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나라장터 쇼핑몰은 신기술·우수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의 매력적인 '큰 시장'으로 육성되고 있다.

김 청장은 "올해 말로 폐지되는 단체수의계약 물품 95개에 대해서도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제도를 통해 단가계약을 체결,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경기회복 어려울 듯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중소기업들의 경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용구)가 5인 이상 중소기업 1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새해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경기를 나타내는 업황전망 SBHI는 85.5를 기록해, 새해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83.6%가 새해경기에 대해 올해 수준이거나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부문별 경기전망(SBHI)을 보면 업황(85.5)과 내수(86.1), 수출(96.9) 모두 기준치(100.0) 미만을 기록해 모든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함께 새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전체기업의 38.2%만 신규투자계획을 갖고 있어 설비투자부진 현상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에 새해 기술개발투자는 전체기업의 40.7%가 신규투자계획을 갖고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투자 의욕은 비교적 높은 편이며, 신규 인력채용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은 10개사 중 4개사(40.5%)만 채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자금조달사정(85.3)과 원자재조달사정(92.4)도 모두 기준치에 미달, 중소기업의 자금 및 원자재조달사정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제품단가 전망 SBHI 또한 86.7를 기록해, 새해에도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중소기업체 갈수록 영세화

중소제조업체의 영세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산업연구원(KIET)은 '중소 제조기업의 영세화 현황과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에서 종업원 5~9인 규모의 영세 소기업 수는 지난 1990년 2만1652개사로 총 사업체수의 31.4%였으나, 2004년에는 5만6976개사로 전체의 절반(50.7%)을 넘어서는 등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중기업(종업원 50~299인)의 숫자는 1990년 8820개사(12.8%)에서 2004년 838개사(7.2%)로 감소했고, 대기업(300인 이상) 수도 1990년 1193개사(1.7%)에서 2004년에는 695개사(0.6%)로 대폭 줄었다. 영세 소기업은 제조업 종업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61.7%에서 1996년 69.2%, 2004년 75.7% 등으로 증가했고, 부가가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44.3%에서 1996년 47.2%, 2004년 49.4% 등으로 확대됐다.

조덕희 연구위원은 이 같은 영세 소기업의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의 전체적인 노동생산성 향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간 노동생산성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 유예

최근 환율하락으로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상환이 최대 1년6개월까지 유예된다. 또 3천억원이 배정돼 있는 수출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 기간과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최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원·엔 환율 하락 등에 대응한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밝혔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직전 또는 당해 연도 총수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수출중소기업이 환율 하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난을 겪을 경우 구조개선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상환을 1년6개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특히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일시적 자금 경색을 겪고 있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에게는 회생특례지원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구조적인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는 출자전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6월부터 12월까지 지원키로 했던 3천억 규모의 수출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기업은행)의 지원기간도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로 연장하고 지원대상 기업 요건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50% 이상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20%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은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58개업체에 115억원이 지원됐다.

중소기업 대출 45조 폭증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이 현기증이 날 정도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2006년 11월까지 무려 44조6000억원이나 증가했다. 2005년 한해동안 증가분(11조364억원)의 4배 가까이 늘었다.

대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이 올해 들어 2조5476억원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현상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급증은 민간소비 부진 등 국내경기가 침체돼 있고 환율마저 급락해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수익성 악화로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 중 일부는 가격이 오른 공장용지 등을 담보로 돈을 더 빌려 부도를 면하고 있는 게 아 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2조8천억 수준

2007년도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의 규모는 2006년의 2조8천억원보다 약간 상회하고 보증 공급은 올해보다 1천억원 증가한 41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07년도 금융시책 설명회'를 열고 2007년 정책자금 총 2조8천억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정책자금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 중인데 책정액보다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밝힌 내년도 정책자금 지원의 기본 방향은 지원 한도는 줄이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은 넓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한 기업에 공급되는 정책자금 지원 한도 45억원이 내년에는 40억원으로 축소된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기업은 현행대로 45억원으로 유지된다.

대신 기술력 및 성장가능성 높은 창업초기·혁신형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수혜 비율은 올해 33%에서 40%로 늘어난다. 정책자금 지원액 중 직접대출 규모는 올해보다 657억원 늘어난 1조1158억원(전체 대비 46%)에 이른다.

신용보증기금 28조5천억원, 기술신용기금 10조5천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2조3천억원 등 내년도 41조3천억원 신용보증과 관련, 장기·고액 이용기업과 중복보증 비율은 줄여 신규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수혜를 늘리기로 했다. 또 한국벤처투자를 통한 내년도 모태펀드의 출자 규모는 3천억원 내외이며 조합결성 금액은 6천억원 규모에서 운용될 계획이다.

중소기업 구매 의무비율 20% 웃돌아

조달청이 공공조달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달청은 2006년 11월 현재 물품 및 용역의 구매실적은 총 9조2천억원으로 이중 중소기업 지원이 전체 구매액의 69.1%인 6조4천억원을 달성, 정부가 제시한 의무구매비율(50%)을 20% 웃돌았다고 밝혔다.

조달청의 이같은 성과는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같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정부조달 우수제품 제도 운영·종합쇼핑몰에 신기술 테마쇼핑몰 운영·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확대·무리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지원 및 판로개척 등 각종 지원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조달청은 분석하고 있다.

조달청은 특히 내년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전면 폐지되는데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체수의계약 폐지 품목은 일정부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으로 흡수한 후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www.shoppingmall.go.kr)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 1인 노동비용 월 322만원

지난해 기업이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급여·퇴직금 등 '노동비용'이 월평균 322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훈련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17.3배에 달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인 35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동비용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22만1천원으로, 2004년 305만7천원에 비해 5.4% 증가했다. 정액·초과급여, 상여금 등 직접 노동비용은 256만9천원으로 전년도 245만원보다 11만9천원(4.9%) 증가했고, 퇴직금·교육훈련비 등 간접 노동비용은 전년도보다 4만4천원(7.2%) 오른 65만2천원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비 등 법정복지비는 20만8천원(2004년 19만2천원), 식사비·주거비 등 법정외 복리비는 17만8천원(2004년 16만2천원)이었다.

기업 규모별 노동비용을 살펴보면 10~29인 이하 영세업체는 238만8천원을 부담하는 반면, 1천명 이상 대기업은 영세기업의 1.9배인 461만1천원을 지출했다.

IT중기 전용 M&A펀드 검토

정보통신부가 IT부품업계 대형화를 위해 IT중소기업 전용 M&A펀드 조성을 검토키로 했다.

노준형 정보통신부장은 최근 IT부품업계 및 펀드업계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IT부품업계 대형화 방안을 위한 CEO 간담회를 갖고 "IT부품업계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IT중소기업 전용 M&A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기존 투자조합에 대한 규약개정 등을 통해 M&A 목적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력은 우수하나 규모가 영세한 IT부품업계와 M&A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PEF(사모투자펀드) 등 펀드업계 간 산업전망 및 투자가치 의견을 공유, 향후 IT부품산업의 대형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키 위한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